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한국의 성평등 제도와 인식, 결과의 국제 비교

박영실 (국가통계연구원)

- 성차별적 제도를 보유한 국가일수록 일반적으로 성 불평등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한국은 성차별적 제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 성차별적 제도와 함께 성 불평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검토한 결과, 한국은 성차별적 제도의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 중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성차별적 제도 수준, 성역할 고정관념, 성 불평등 결과가 모두 낮은 북유럽 국가들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수준의 달성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해소 등 다층적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편, 한국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추이를 보면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2010년과 2018년 사이에는 증가한 양상을 보여준다.

2025년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기원인 북경여성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이 발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강령은 1995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여성대회의 성과로, 빈곤·교육훈련·건강·폭력·경제·의사결정 등 12개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후, 여러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은 이 강령

의 정신을 기반으로 성주류화 전략을 수용하였다. 나아가, 2015년에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되면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다섯 번째 목표로 ‘성평등’이 명시되어, 성평등은 명실상부한 국제규범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 구축과 정책 추진을 다방면에서 전개해 왔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2001년 여성부 설치, 2012년 성별영향평가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고용, 일·가정 양립, 돌봄, 대표성, 젠더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의 성평등 관련 지표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0년 5.0%에서 2024년 17.5%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0년 3.7%에서 2025년 20.3%로 상승하였다(SDG 데이터베이스 참고). 또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은 2010년 61.6%에서 2024년 70.9%로 증가하였다(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참고).

하지만 사회제도가 성 평등한 방향으로 발전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앞에서 언급한 지표 모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의 성평등 논의가 주로 경제적·정치적 참여와 같은 성과(outcome)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적 맥락으로 ‘제도적 차원’과 ‘인식적 차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도적 차원은 법·정책 등 성평등을 보장하는 구조를 의미하며, 인식적 차원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성역할에 관한 태도나 성평등 의식을 포함한다. 성 평등한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사회 전반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동한다면, 제도의 효과가 실질적 평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첫째, 제도적 발전이 실제로 성 평등한 결과를 이끄는지 검토하고,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평등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제도의 발전 수준이 유사한 상황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정도가 성평등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성 평등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

이 글에서 제기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세 가지이다. 첫째, 성평등 제도 변수는 OECD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를 활용하였다. OECD는 성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측정하기 위해, 2009년부터 4~5년 주기로 SIGI를 발표하고 있다. SIGI는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사회제도를 ① 가족 내 차별(discrimination in the family), ② 신체적 온전성 제약(restricted physical integrity), ③ 생산과 재정 자원 접근 제약(restricted access to productive and financial resources) ④ 시민권 제약(restricted civil liberties)의 4개 영역을 통해 살펴본다. 영역은 16개 지표로 측정되며, 각 지표는 공식 및 비공식 법률의 차별 수준, 사회적 규범, 관행적 차별 수준의 세 변수를 종합하여 산출된다. 최종적으로 SIGI는 0과 100 사이의 값으로 표시되며, 0은 차별이 없는 상태를 100은 차별이 가장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이동선 외, 2024).

다만, SIGI는 일부 데이터의 낮은 품질 및 결측 등으로 인해 앞에서 설명한 개념적 틀을 완벽히 구현하지는 못한다. 특히, 규범 및 관행 변수는 국제기구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므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가 여럿이다. 반면, 공식 및 비공식 법률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한 정보는 OECD가 각 국가에 직접 설문 을 하여 수집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SIGI는



국가별 성차별 제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적 변수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글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23년 SIGI이며, 종합지수가 산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140개국이다.

둘째, 성평등 인식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사회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 학술 프로젝트로 1981년 시작되어 현재 7회차(2017~2022년)까지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10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참여 연도 및 응답 항목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회차별로 1982년, 1990년, 1996년, 2001년, 2010년, 2018년에 참여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성역할 인식 변수는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① ‘엄마가 일을 하면 미취학 자녀가 힘들어진다(Pre-school child suffers with working mother)’, ② ‘남성이 배우자를 때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Justifiable: For a man to beat his wife)’, ③ ‘여성이 남편보다 소득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Problem if women have more income than husband)’, ④ ‘대학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중요하다(University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for a girl)’, 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기업 임원이 된다(Men make better business executives than women do)’, ⑥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정치지도자가 된다(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s than women do)’. 성역할 고정관념은

각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먼저, 4점 척도의 ①번, ④번, ⑤번, ⑥번 항목과 5점 척도의 ③번 항목은 ‘매우 동의’와 ‘동의’ 응답 비율을 계산하고, 9점 척도의 ②번 항목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제외한 응답 비율을 계산하였다.

국제 비교 분석에는 7회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항목에 응답한 국가 수는 최소 64개국에서 최대 92개국이다. 한편, 한국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추이 분석에는 2회차부터 7회차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셋째, 성평등 결과 변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를 활용하였다. GGI는 한 국가의 자원과 기회에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하고 그 해소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이 지수는 2006년부터 매년 발표되며, 4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4개 영역은 ① 경제 참여와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이하 경제), ② 교육 성취도(educational attainment, 이하 교육), ③ 건강과 생존(health and survival, 이하 건강), ④ 정치적 권한(political empowerment, 이하 정치)이다. 지수는 0과 1 사이의 점수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지수는 남녀 간의 상대적 격차를 측정한 것이므로,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와 수준이 높더라도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면 성 격차 지수

와 순위는 낮아질 수 있어,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발표 자료를 활용하였다. 148개국이 조사 대상이다.

요약하면, 성평등 제도는 SIGI 2023년 자료, 성평등 인식은 WVS 7회차(2017~2022년) 자료, 성평등 결과는 GGI 202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상대적 결과 수준을 측정하는 GGI 자료를 최근 연도 자료로 활용한 이유는 제도와 인식이 성평등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성평등 제도와 성평등 결과 간 관계 분석

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그 사회의 제도를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법 및 제도, 정책 속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절에서는 SIGI와 GGI를 통해서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xi-32]는 SIGI 점수가 높을수록 GGI 점수가 낮아지는 것, 즉 두 지표 간의 반비례 관계를 보여준다. SIGI 점수가 높다는 것은 사회 제도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GGI 점수가 낮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커져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구조적 기반을 강화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xi-32]에서 보듯 한국의 SIGI는 19.8이며, GGI는 0.687이다. 성차별적인 제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나, GGI는 전 세계 평균(0.688점)과 유사하고 전체적인 순위(101위/148개국(순위는 원자료 기준 제시))를 고려하면 성평등은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차별적인 제도 수준이 매우 낮고 GGI 점수가 유사한 국가로는 루마니아(15.7, 0.697), 헝가리(15.2, 0.684), 체코(15.0, 0.686)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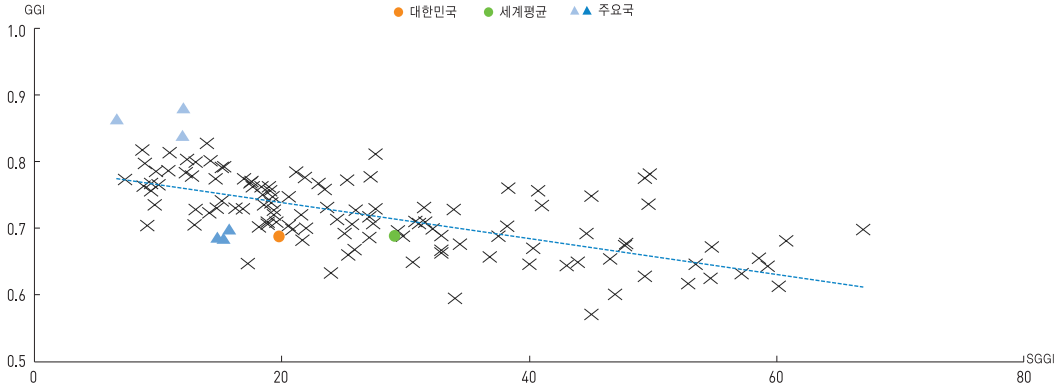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GGI의 하위 영역(건강, 교육, 경제, 정치)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제도 내 성차별 수준이 각 영역의 성평등 성과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xi-33]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SIGI 점수가 낮을수록 GGI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양상이 다소 다르다.

먼저, 네 영역 중 건강 영역의 GGI 점수는 SIGI 점수 분포와 관계없이 1점대에 집중되어 있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 평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GGI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를 측정한 것으로, 1점이라는 의미가 성평등 격차가 없다는 의미이지, 절대적 수준도 매우 높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은 0.976점인데, 순위상으로는 35위로, 네 영역 중 가장 성평등 성과가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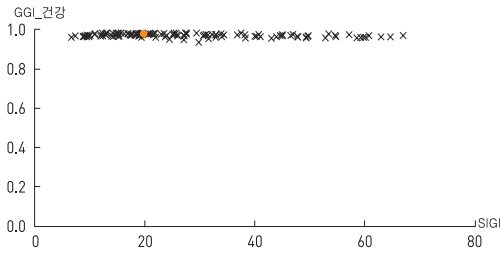
반면, 나머지 세 영역은 SIGI와 GGI 간에 대체로 반비례 관계가 관찰된다. 교육 영역의 경우,

[그림 xi-32] 국가별 SIGI와 GGI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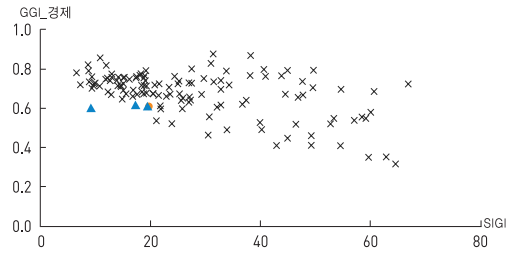


[그림 xi-33] 국가별 SIGI와 GGI 하위 영역 간 산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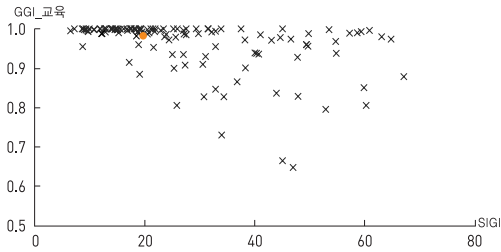
1) 건강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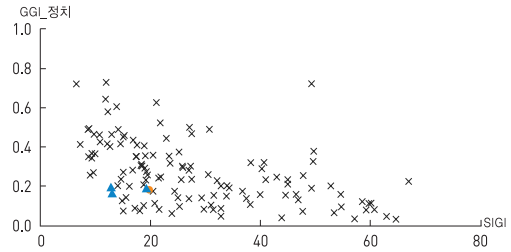
3) 경제 영역



2) 교육 영역



4) 정치 영역



주: 1) SIGI와 GGI 모두 조사된 126개국을 대상으로 함.

2) 결정계수(R²)는 전체 0.45, 건강 0.11, 교육 0.18, 경제 0.27, 정치 0.23임.
출처: OECD SIGI 및 세계경제포럼 GGI 데이터베이스(접속일: 2025.8.26.)

차별적인 제도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되는 SIGI 20점을 기준으로 양측의 국가별 분포 양상이 다르다. 앞쪽에서는 GGI 점수가 1점대

에 집중되어 있으나, 뒤쪽에서는 국가들이 더 퍼져 있다. 한국의 교육 영역 GGI는 0.980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전체적인 순위는 98위이다.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국가로는 페루(18.6, 0.982), 독일(12.4, 0.988), 리투아니아(12.3, 0.988) 등이 있다.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는 SIGI 점수가 높을수록 GGI 점수가 낮아지는, 즉 성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더 뚜렷하다. 경제 영역에서 한국의 GGI 점수는 0.608(114위)인데, 순위의 측면에서 네 영역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SIGI 및 GGI가 유사한 수준의 국가로는 코트디부아르(17.3, 0.615), 엘살바도르(19.6, 0.607), 이탈리아(9.2, 0.599) 등이 있다. 정치 영역에서 한국의 GGI 점수는 0.182(92위)로, 몽골(13.1, 0.163), 우루과이(19.4, 0.190), 몬테네그로(13.0, 0.194) 등과 비슷하다.

요약하면, 차별적인 사회제도를 보유한 국가일수록 성 불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건강 영역보다는 경제와 정치 참여 영역에서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결과(GGI)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회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이다. 이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평등 인식과 성평등 결과 간 관계 분석

여성의 능력과 권리를 사회적으로 저평가하는 편향된 규범은 여성의 행동을 규제하고,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행동과 모습의 경계를 설정

함으로써 여성의 선택과 기회를 제한한다(UNDP, 2023).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성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WVS를 통해 측정된 성역할 고정관념 변수와 GGI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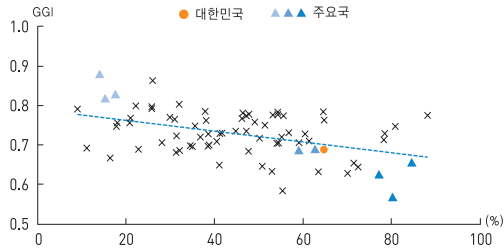
[그림 xi-3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한 여섯 변수 모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GGI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즉,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성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경제적·정치적 권한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다음에서는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엄마가 일을 하면 미취학 자녀가 힘들어진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GGI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의 경제 활동을 가정 내 돌봄의 결손으로 인식하는 사회일수록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요르단(84.6%), 파키스탄(80.2%), 이집트(77.2%)가 이에 해당한다. 대척점에는 핀란드(14.1%, 0.879), 스웨덴(15.3%, 0.817), 뉴질랜드(17.7%, 0.827)가 있는데 이들 국가는 낮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한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국가로는 아제르바이잔(62.8%, 0.688)과 중국(59.0%, 0.686)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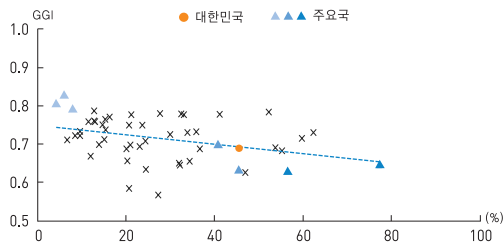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성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GGI는 낮게 나타났다. 남성의 배우자 폭력에 대한

[그림 xi-34] 성역할 고정관념과 GGI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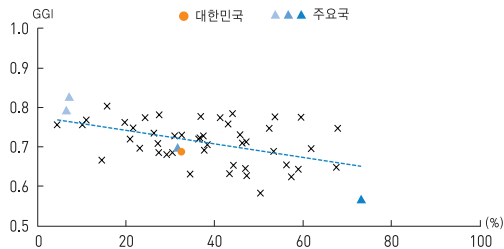
1) 엄마가 일을 하면 미취학 자녀가 힘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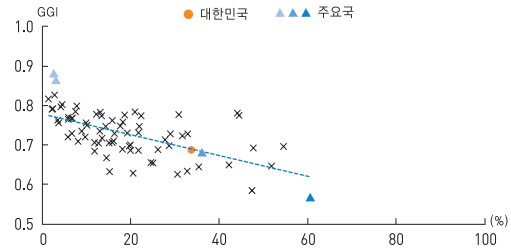
2) 남성이 배우자를 때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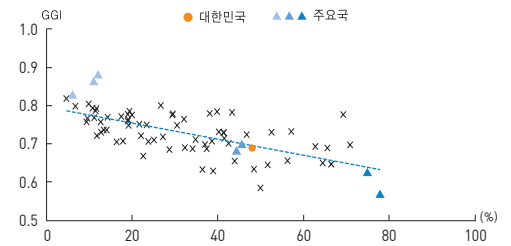
3) 여성이 남편보다 소득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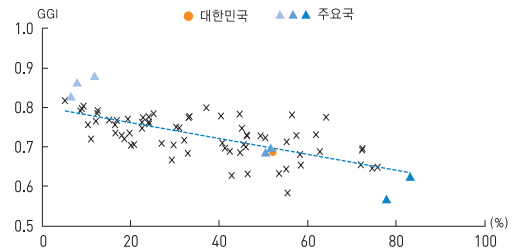
4) 대학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중요하다.



5)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기업 임원이 된다.



6)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정치지도자가 된다.



주: 1) 성역할 고정관념은 각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을 측정하였으며, 분석 대상 국가 수는 1)번, 4)번, 5)번, 6)번은 75개국, 2)번과 3)번은 51개국임. 참고로, 결정계수(R²)는 그래프 번호 순서대로 0.20, 0.13, 0.25, 0.38, 0.44, 0.48임

출처: WVS 데이터베이스(접속일: 2025.10.10.); 세계경제포럼 GGI 데이터베이스(접속일: 2025.9.26.)

사회적 수용도가 높고 성 불평등 수준도 높은 국가는 타지키스탄(77.3%, 0.646), 모로코(56.6%, 0.628) 등이었고, 뉴질랜드(6.0%, 0.827), 독일(4.2%, 0.803), 호주(8.0%, 0.792)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동의 비율은 45.6%이며, 카자흐스탄(40.9%, 0.698)과 레바논(45.5%, 0.632)이 수치상 인접국이었다.

‘여성이 남편보다 소득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의견과 GGI 간의 관계도 앞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파키스탄(73.1%, 0.567)이었고 낮은 국가로는 호주(6.4%, 0.792), 뉴질랜드(7.1%, 0.827)가 눈에 띈다. 이 의견에 대한 한국의 동의 비율은 32.5%였으며 카자흐스탄(31.6%, 0.698)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대학 교육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 또한 GGI와 부적 관계를 보였다. 한국의 동의 비율은 33.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말레이시아(36.1%, 0.681)와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파키스탄(60.4%, 0.567)은 동의 비율이 높고 GGI가 낮은 국가에 속한다. 이에 비해 핀란드(2.6%, 0.879), 노르웨이(3.1%, 0.863)는 교육 영역에서의 성평등 인식이 매우 높았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기업 임원이 된다’는 인식 역시 성평등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동의 비율은 47.9%로, 카자흐스탄(45.5%, 0.698), 말레이시아(44.3%, 0.681)와 비슷하다. 그러나 파키스탄(77.8%, 0.567), 이집트(74.9%, 0.625) 등은 높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 불평등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핀란드(11.9%, 0.879), 노르웨이(10.9%, 0.863), 뉴질랜드(6.0%, 0.827) 등은 성평등 인식도 높고 성평등 성취도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정치지도자가 된다’는 인식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동의 비율은 52.0%이며, 중국(50.4%, 0.686) 및 카자흐스탄(51.6%, 0.698)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파키스탄(77.7%, 0.567), 이집트(83.0%, 0.625)는 동의 비율이 높고 GGI는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반대로 핀란드(11.8%, 0.879), 노르웨이(7.9%, 0.863), 뉴질랜드(6.5%, 0.827)는 정치 영역에서 성평등 인식도 높고 성평등 성취 수준도 높은 국가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GGI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국가 수가 제한적이어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 분석 결과에 한해서 설명하면 꽤 일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는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및 호주, 뉴질랜드이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국가는 파키스탄과 이집트였다.

제도적 요인을 고려한 성역할 인식과 성평등 결과 간 관계 분석

앞에서 확인한 성역할 인식과 성평등 성취 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성평등 제도의 발전 수준을 고려해도 유지되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차별적 제도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군(SIGI 20점 이하)과 차별적 제도 수준이 보통 이상(SIGI 30점 이상)인 국가군으로 나누어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후자의 국가군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GGI 관계가 대부분의 지표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차별적 제도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군(한국 포함)의 결과만 [그림 xi-3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차별적 제도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여섯 개 중 다섯 지표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나타냈다.

먼저, ‘엄마가 일을 하면 미취학 자녀가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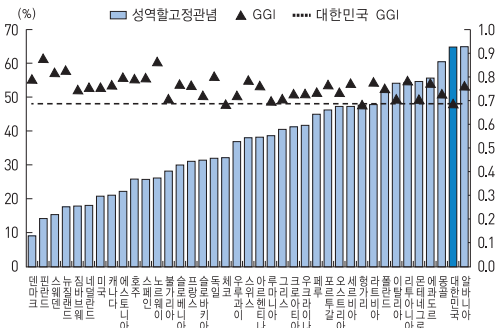


어진다’는 의견에서 한국(64.7%)은 알바니아(64.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동의 비율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다. 알바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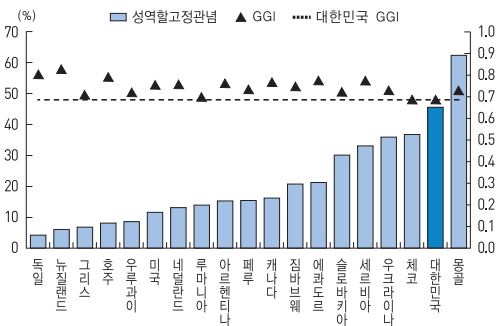
의 GGI는 한국보다 높은 0.763이며, 한국보다 GGI가 낮은 두 곳의 성역할 고정관념 또한 한국보다 낮았다((헝가리 47.7%), 체코(32.1%)).

[그림 xi-35] 성역할 고정관념과 GGI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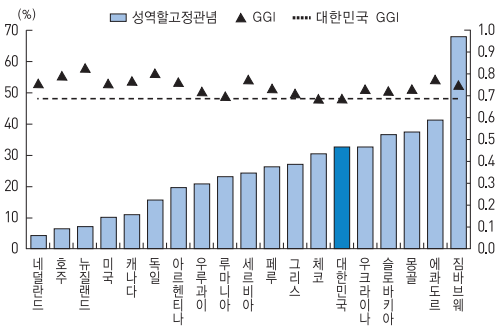
1) 엄마가 일을 하면 미취학 자녀가 힘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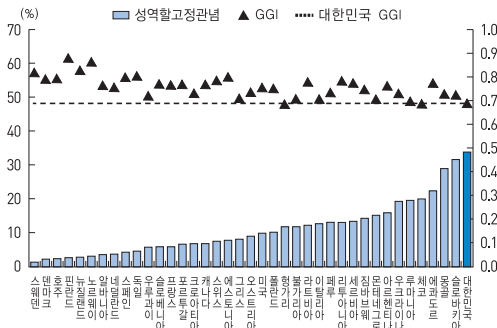
2) 남성이 배우자를 때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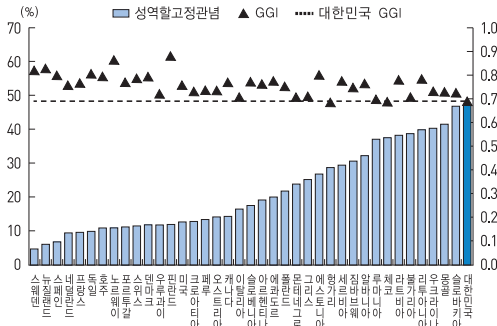
3) 여성이 남편보다 소득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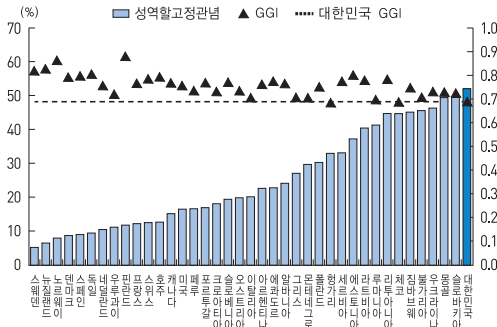
4) 대학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중요하다.



5)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기업 임원이 된다.



6)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정치지도자가 된다.



주: 1) 분석 대상 국가 수는 1), 4), 5), 6)은 39개국이며, 2), 3)은 19개국임. 참고로, 결정계수는 그래프 번호 순서대로 0.25, 0.22, 0.17, 0.25, 0.36, 0.29, 0.33임
출처: WVS 데이터베이스(접속일: 2025.10.10.)

한편, 동의 비율이 낮은 국가는 덴마크(9.0%), 핀란드(14.1%), 스웨덴(15.3%) 등이다.

남성의 배우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데이터가 가용한 19개국 중 한국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국가는 몽골(62.4%) 이었고, 한국 다음으로 체코(36.7%), 우크라이나(35.9%) 순이다.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난 독일(4.2%), 뉴질랜드(6.0%), 그리스(6.7%), 호주(8.0%) 등의 GGI는 높은 편에 속한다.

‘여성이 남편보다 소득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항목에 대한 한국의 동의 비율은 다른 지표에 비해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짐바브웨(67.8%)를 제외한 네 개국의 동의 비율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한편, 이 지표에서도 네덜란드(4.3%), 호주(6.4%), 뉴질랜드(7.1%)에서 동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대학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정관념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 슬로바키아(31.6%), 몽골(28.9%)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GGI 점수는 한국보다도 높았다. 앞의 지표와 유사하게 스웨덴(1.4%), 덴마크(2.2%), 호주(2.4%), 핀란드(2.6%) 등의 국가에서는 고정관념이 낮은 수준이었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기업 임원이 된다’는 의견에 대한 한국의 동의 정도는 47.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슬로바키아(46.7%), 몽골(41.4%), 우크라이나(40.2%) 순이다. 하지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의 GGI는 한국보

다 높은 편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국가로는 스웨덴(4.7%), 뉴질랜드(6.0%), 스페인(6.8%), 네덜란드(9.4%)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정치지도자가 된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의 동의 비율(52.0%)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슬로바키아(50.4%), 몽골(49.3%) 순이었다. 역시, 이 국가들의 GGI는 한국보다 높았다. GGI가 한국보다 낮은 두 국가는 헝가리(32.9%), 체코(44.7%)였는데 이들 국가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한국보다 낮았다.

이러한 국제 비교 결과,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성평등 성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동일한 제도적 발전 수준의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낮고, GGI로 측정된 성평등 성취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성평등과 사회적 인식이 일관된 진전을 보이는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성평등 제도의 발전과 성역할 인식의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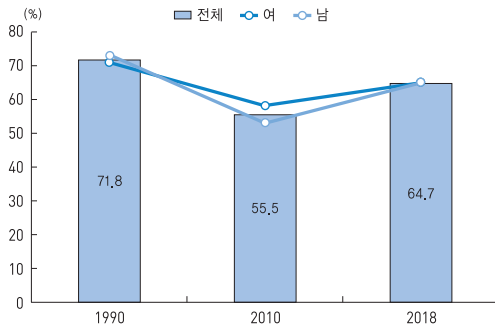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성평등 분야에서 여러 제도적 성취를 이루어 왔다. 앞에서 언급한 성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함께, 각 분야에 성평등 정책이 단계적으로 확립되었다. 2006년의 호주제 폐지는 성역할 태도에 대한 상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고용 분야에서는 2006년에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평등 촉진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실시하였고, 정치 영역에서는 2000년 여성할당제 도입 및 2005년 공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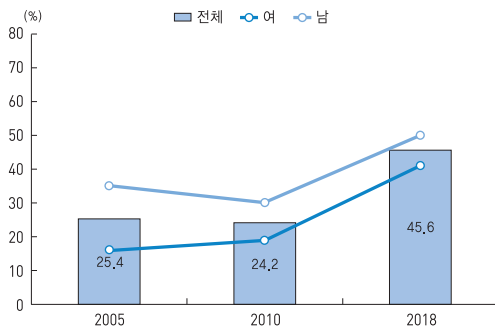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미투운동의 성과로 2019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

[그림 xi-36] 성역할 고정관념과 GGI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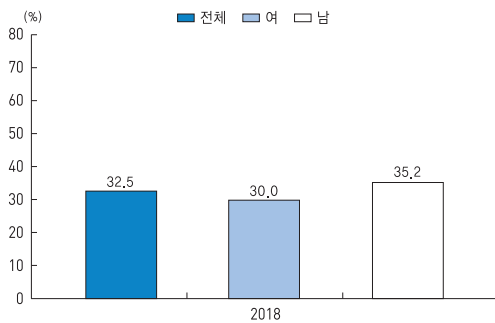
1) 엄마가 일을 하면 미취학 자녀가 힘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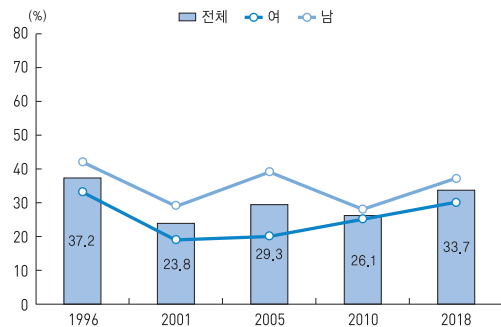
2) 남성이 배우자를 때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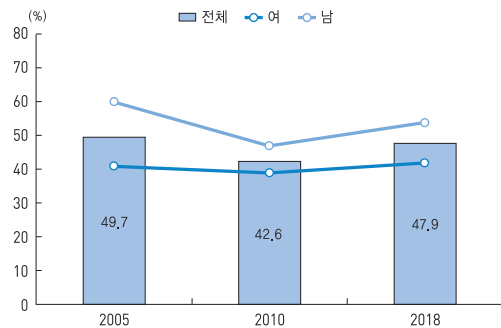
3) 여성이 남편보다 소득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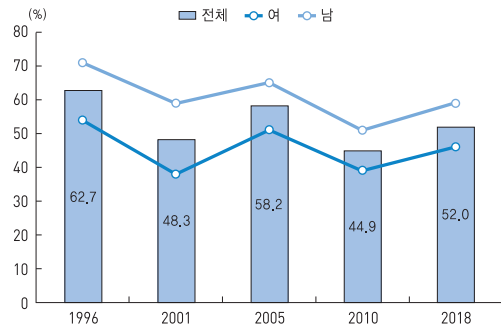
4) 대학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중요하다.



5)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기업 임원이 된다.



6)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정치지도자가 된다.



주: 비율은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계산한 것임.
출처: WVS 데이터베이스(접속일: 2025.10.10.)

제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해 남녀가 함께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윤지소 외, 2024).

이처럼 한국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성평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이러한 성취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도적 진전과 달리 성역할 고정관념의 감소 추세는 뚜렷하지 않다. [그림 xi-36]은 여섯 개 성역할 고정관념 지표의 변화 추세이다. 시점별로 등락을 보이나, 가장 최근의 조사자료인 2018년을 보면 8년 전인 2010년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엄마가 일을 하면 미취학 자녀가 힘들어진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 비율이 1990년 72%에서 2010년 56%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65%로 다시 증가하였다. 동의 비율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다음으로, ‘남성이 배우자를 때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05년 25%에서 2010년에 24%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4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남성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모든 시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집단 간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여성의 소득이 남편보다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항목의 경우, 한 회차 데이터만 있어 시계열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이 항목에 대한 남성의 동의 비율은 여성보다 5.2%p 더 높았다.

‘대학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중요하다’는 의

견에 대한 동의 비율은 1996년 37%에서 2001년 24%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다시 34%가 되었다. 동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2001년 최저점인 19%를 기록한 이후 2018년 30%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고등교육 취학률에서 성별 격차가 해소(2015년 남성 67.1%, 여성 67.9%)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정관념은 건재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기업 임원이 된다’(2005년 50%, 2010년 43%, 2018년 48%)와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정치지도자가 된다’(2005년 58%, 2010년 45%, 2018년 52%)는 의견에 대한 2018년의 동의 비율 또한 2005년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회귀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OECD는 2023년 사회제도 및 젠더 지수 보고서를 발간 이후 4년 동안 법제도 측면의 진보가 뚜렷한데, 인식과 태도 및 행동과 관련해서는 백래시, 경제 사회적 위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진보와 퇴보가 뒤섞인 양상이 발견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맺음말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한국은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고,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그 결과, OECD의 SIGI 기준으로 한국은 성차별적



제도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로 평가된다. 하지만 제도적 수준에 비해 한국의 성평등 성취 수준은 높지 않다.

그러한 원인의 하나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분석하였는데, 성평등 제도가 발전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매우 강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매우 낮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성평등이 단순한 제도적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함께 작동하는 다층적 과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평등 의식의 향상과 사회문화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생활, 교육, 경제 및 정치활동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제도를 통한 참여적인 분배가 권고되더라도, 문화적 가치 유형이 어떤 정체성을 열등하거나 배제된 것으로 규정한다면, 종속 또는 불인정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의 전체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모든 삶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정상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Fredman, 2008).

참고문헌

- OECD, 2023, SIGI 2023 Global Report: Gender Equality in Times of Crisis, OECD Development Center.
 UNDP, 2023, Breaking Down Gender Biases: Shifting social norms towards gender equality.
 WEF, 2025, Global Gender Gap Report 2025.
 Fredman Sandra, 2008, Human Rights Transformed, 「인권의 대전환」, 조효제 옮김, 교양인.
 윤지소, 이미정, 장윤선, 정성미, 조혜승, 김유민, 송지선, 2024, 「북경행동강령 채택 30주년 이행평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동선, 주재선, 김효주, 송치선, 2024,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